변화와 계승의 새로운 모색

—한총련 대의원 대회 의의와 학생운동의 진로 전망

지난 25일에서 27일까지 전북대에서 열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창립 대의원대회가 전체인원 1천6백3명 중 9백74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한총련건설을 대중적으로 선포'하고 '총노선을 확정'하여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총련 초대 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정치외교 4)군이 9백27명이 투표해 8백20명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대의원대회 사회를 본 정부지역학생협의회 의장인 허현준(전북대 총학생회장, 회계 88)군이 인사말을 통해 "한총련 창립 대의원대회에서 진행하는 총노선 수립, 강령과 규약 채택, 의장선출과 용립, 통일방안 합의등을 협차게 확정하는 것은 백만청년학생의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인 한총련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한총련 건설은 각급학생회의 안착화와 대중조직으로 성장한 전대협의 발전적 계승과 변화된 정세와 조직활동의 전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총련 기관지 〈대학생〉편집국장 김지석군은 "자주적 학생회의 제기와 학생회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내용이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로 나가고 총학생회에서 과학생회에 이르는 조직의 질서를 만드는 것과 함께 지역단위운동의 활성화와 지역총련의 건설"을 말하고 또한 "대선이후 새롭게 조성된 사회정치적 분위기에 대한 학우대중의 관심을 생활속에서 높여 내고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총련 건설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생활, 학문의 영역을 학생회 활동에서 전문적 역량이 없는 지금의 상태에서 어떻게 담아낼것인가 하는 것과 변화된 정세속에서 지주적 학생회의 정치투쟁에 대해 새로운 모색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한총련 총노선에서는 생활과 학문에 눈을 돌려 학우들의 요구를 귀담아 들고 학생회간부와 학우들이 하나가 되기 이해 서로 도와주고 함께 변화하는 관계로 밝히고 있다. 또한 예전의 일방적인 선전, 선동을 통해 대규모 투쟁을 전개해 학우들이 객체가 되었던 운동방식을 탈피해 한사람 한사람이 진솔하게 많이 만나는 것을 조직적으로 전행해 집단의 정치력을 높여내는 새로운 운동방식을 이야기 한다.

총노선에서는 지금의 학우들의 정서호름을 개인생활과 경제적욕구가 높은 만큼 집단적으로 모아지지 않아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통일되지 못한다고 밝히고 또한 김영삼정권의 성격과 통치방식을 선거를 통해 수립된 민간정부이면서 외세 의존적인 경제정치구도를 가져 부분적인 개혁조치를 통해 지지기반 확보를 하고 정세위기는 민중에게 전가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번 한총련총노선에 대해 조선대 이승영 공대 학생회장은 "총노선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학생회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김준원 충남대 총학생회장은 "우리 운동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93년의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해 총노선이 간부와 학우의 활동의 상을 제대로 지도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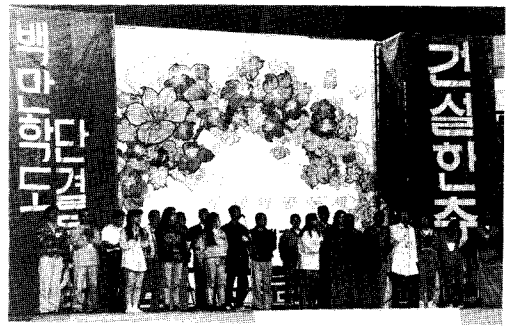
또한 이번 행사의 통일 방안을 확정하였는데 김병삼 한총련조통위위원장(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전대협 통일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91년부터 제기된 연방제 통일방안 합의를 총화하고 통일의 전제조건, 통일국가의 이념, 통일정부의 구상,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와의 관계, 연방정부의 입무로 되어 있다"고 말해 5월부터 각 지역, 대학에서 통일방안에 대해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합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 단과대학생회장까지 포괄하는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이 넓어지고 1,600여명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성이 확대되는 점과 백만학도의 생활과 학문을 중심으로 투쟁을 통일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 대회장을 퇴장한 '민중권력 쟁취와 한총련 민주적 강화'를 표방한 일부 대의원 중 조한경 한림대 총학생회장은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의 발언을 봉쇄하는 것은 한총련의 비민주적인 요소이다"라고 밝혀 한총련이 서로다른 정치적 의견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실제 이번 대의원대회 기간 동안 많은 대립이 있었다. 전북대 총학생회와 한총련 민주적 강화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마찰, 그리고 준비위단의 단독집회와 회의 도중 일부 대의원들의 집단퇴장에 의한 권한 포기 등은 이전부터 지속되어왔던 문제들이며 또다시 재현되었던 것이다. 결국 지금의 한총련의 문제를 노정했고 민주집중제의 원칙의 구현과 통일단결을 더욱 더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진실과 사랑으로 학우들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에서 한총련의 모습은 변화되고 우리의 앞길은 찬란하고 승리는 낙관적이다"라는 한총련 김재용 초대의장의 당선 소감에서 밝혔듯이 한총련은 나의 조직으로 백만청년의 가슴에 살아 있는 것이다.



변화한 정세속, 자주적 학생회 건설목표
정치적 이견의 민주적 수렴 과제로 남아

<전국대학신문기자 연합 공동기자단>
〈文責:정미경記者〉

한주메모

▲26일—국방부, 차세대 전투기·인사청탁등 군비리 전면 조사. 대검, 김중호 전해군총장부인 신영자씨 조사, 진급뇌물 수억원 수수 시인.

—천도교 중앙본부, 동학농민 혁명 첫봉화 '보은취회' 1백돌 기념식 개최.

—임시국회 개회, 옴서버 경영자 '이동근 석방안'표결로 진통 예상. 새의장 선출과 공적자 윤리법을 다룰 예정.

—서울지검 특수1부, 재개발 아파트 시공권 대가 10억뇌물 확인후 럭키개발 구자원 부회장 구속.

▲27일—감사원, 군 전력증강 사업 특별감사. 무기가격, 계약조건에 중점 조사.

—60%의 지지율을 얻어 엘친 신임 확보 얼단 성공. 주요 12개 지역의 국민투표 결과.

—조기입 전 사령관 연행. 간급 구속장 발부. 김중호 전 해군참모총장 소환 조사.

—당적변호사제도 내달 실시, 서울 지역 피의자 요청하면 무료접견과 자문가능토록.

→전대협 계승 '한총련'공식 출범. 문민정부시대의 학생운동 새출발 선언.

▲28일—삼성동 6개 추가 구속키로, 해군 뇌물 진급 관련자 계속 늘어나. 김중호 전 해군참모총장, 조기입 전사령관 수감.

—군수본부 감사 착수. 감사원, 율곡사업 내주 본격조사

—서울 형사지법, 검기춘씨 위헌제청 수용. "대선법 36조등 표현자유 제한검토" 정주영씨도 제청밝혀.

▲29일—방위산업체 대대적 특별감사. 감사원 방침, 30여곳 제약미리 여부 등.

—세무서, 주택은행등 국회은행에 대한 실시감사할 예정. 내달초 10여곳 은행에 대해.

—중국·북한 국경서 충돌, 외교협촉 중단 이어. 북한, 대중국 발포 수령 사망.

—미국 대부 5억불대 무기판매, 러시아신문 "의회서 군사기술 이전도 승인했다"고 보도.

—이스라엘서 방사능 누출사실 밝혀져. 8개월전 다이모나 원자로 은폐기도, 제르노빌 수준의 피해 우려.

▲30일—사정당국, 교도소 비리최결표명. 금품수수·물품반입 조사결과 경무관 포함 20여명 비리확인돼.

—9개 대 본고사실시 확정.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대, 서강대, 카톨릭(의예과), 한성대, 포항공대, 수원 카톨릭대

▲5월 1일—안기부 부처출입 재개, 3월부터 조정관 배치와 은밀 정보수집 밝혀져. 노조활동, 검찰수사 동향보고 등

신문 명제비평

증면경쟁이 가져온 질낮은 신문

김영삼 정부 출범 두달이 지나면서 사회 각계가 '개혁' 과 '변화'의 소용돌이에 싸이고 있다. 이것에 대한 평가는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이뿐은 전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확실하다.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신문업계라고 피해갈 리는 만무하고 지난 4월 한달 동안 신문계는 지켜보는 사람을 어지럽게 할 만큼 잦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

우선 지난 4월1일 (동아일보)가 조간으로 발행하고 지면도 주 5일 32면으로 늘리면서 조간신문을 비롯한 신문업계 전체에 조간화와 증면경쟁이 일고있다. 조간신문 시장에서 (동아일보)의 참여로 가장 큰 위협을 느낀 (조선일보)가 32면 발행을 주 5회로 늘렸고 (한국)과 (경향)도 이에 견줄만한 증면을 계획하고 있고 월요판 발행, 전국동시인쇄, 조석간 병간 등 신문시장 전체가 '전시상태'에 들어갔다.

더욱더 복잡, 다양해진 사회의 정보를 소화하려면 증면을 통해 정보량을 늘리는 것이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의 양적인 면에서도 신문 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정보량이 늘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듯 하다. 한국언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88년 16면에서 92년 7월 현재 24면으로 증간함에 따라 기사가 차지하는 지면은 74.3% 증가한데 반해 광고는 9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증간이 정보량의 증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광고량의 확충을 위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보의 양적인 변화뿐 아니라 요즘 신문을 보면 중간은 됐어도 실제로 더 늘어난 신문지면을 채우는 기사들은 스포츠 신문에나 어울릴 법한 연예나 오락성 기사임을 쉽게 볼 수 있다.

결국 신문사들이 다투어 지면을 늘리고 주중에 하루도 쉬지 않고 내는 '신문전쟁'이라 할 만한 경쟁이 독자에게 더 질높은 신문을 보여주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다면 언론노동자들의 노동량과 노동강도를 끝없이 높이는 이런 경쟁이 결국 가져올 것은 무엇인가. 1850년 미국에서 동전 한닢에 살 수 있는 대중지가 나온 이래로 재정의 70% 정도를 광고에서 충당하는 값싼 신문 시대는 신문사에 광고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놓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면광고를 비롯한 광고의 확보를 신문사의 '밥줄'로 만들어 놓았다.

이윤창출이 존재이유인 기업이라는 울타릴 벗을 수 없다면 광고를 둘러싼 이와 같은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안쓰러운 일은 경쟁의 방법이 결코 정당하지 않다는 데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신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언론학자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용감하게'말했듯이 신문 발행부수의 80%가 읽히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광고주에게 우리는 이만큼 많은 독자, 즉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23%나 되는 신문을 바로 고지도매상으로 넘기면서 찍어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첫번째 해결책은 95년 7월로 미뤄놓은 신문발행부수의 공개이다. 얼마만큼의 신문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지 알려주는 이 제도의 시행이 우선은 무한적 출혈경쟁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 4월 7일 '신문의 날'을 맞아 신문인들이 다짐한 언론인의 자정노력과 공정성의 확보, 상업성의 배제 등은 말로써가 아니라 속살 보이기 싫어서 자꾸 미루고만 있는 발행부수의 공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박 광 민
〈신문방송학과 신문연구소〉

시사상식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지난해 북사방지장치 '판도라'의 개발자인 지용익씨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아래우 한글 2.0 전문가용'의 복사방지장치를 해제하고 이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에게 적지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에 이어 올해에 들어서는 지난 2월 검찰이 용산전자상가에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바 있고 중견 컴퓨터 업체 몇 군데를 지목해 관계자를 구속시킴으로써 정부의 불법복제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침해행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로 명시됨으로써 범죄행의 소극성을 면키 어렵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그동안 개인은 물론 대기업에서조차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 무단 사용하는 것은 관행화 되다시피 했다. 이때문에 거액의 돈을 투자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국내영세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 프로그램 개발에 의욕을 잃고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았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볼 때 검찰의 과감한 단속조처는 이 같은 관행에 쐐기를 박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호한다는 근본취지에 있어 매우 합당하다 하겠다.

사실 컴퓨터는 강력한 복사기(?)로서 누구나 손쉽게 프로그램을 복사할 수 있는데다 쓸만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수십만원에 달하는 고가이므로 사용자가 불법복제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매우 어렵다. 소프트웨어 산업 초기에 광범한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즉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해봄으로써 어떤 소프트웨어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회를 갖게되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복제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거나 프로그램을 현업에 적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사람들과 그저 프로그램을 호기심 차원에서 사용해보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일벌백계로 일관한다면 법집행 자체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개발자 및 관매자들은 무조건 고소만 할 것이 아니라 가격을 현실화하여 정품사용을 보다 자연스럽게 유도해 자신들의 생존기반인 소비시를 적대시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 또한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 지원해 전국민을 위한 공개프로그램과 쉐어웨어등의 개발보급을 독려하는 등 정보화사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성의있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형열 (다산정보시스템 대표)

침해자 이익액은 저작권자 손해액 추정

정부는 지난 86년 선진국들의 지적소유권 보호 요구를 수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의 제13조 2항은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한 후 동법 5장에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해두고 있다. 동법의 제 4장인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항목에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세계경영 우리기술—대우

지난날 세계로 치달았던 한민족의 기백을
오늘, 대우가 「세계경영」으로 이어갑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저 넓은 세상으로 거침없이 나가면 세계와
미래의 새로운 주인 될 수 있다는 큰 가르침이 있는 만주벌판…
지금은 넘의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는 일천오백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우뚝 서서 한민족이 이 땅의 주인이었음을 일깨워
주는 우리 선조의 커다란 목소리가 있습니다.
먼 옛날 굽힐 줄 모르는 힘찬 기상으로, 광활한 대륙을 향해
내달았던 고구려인들의 굳센 발걸음들—
그것은 바로 창업 이래 지난 4반세기동안 미지의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의 발길과 어느 기업보다 앞선 해외시장

한민족 「세계경영」의 시대를 연다

개척으로 우리경제의 세계화를 주도해온 대우의 정신적
좌표입니다. 이제 대우는, 세계로 치달았던 선조들의 기백을
이어, 한국의 자존(自尊)을 지구촌 곳곳에 심었던 해외시장
개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기술로 해외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경영의 脫국경화전략 「세계경영」
으로 다시 한번 우리경제의 중흥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을 넘어 '해외현지경영'으로—
대우가 우리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지역블록화의 급속한 전전,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추세 등으로 해외사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오늘날—

대우가족